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정치학)

민심의 흐름이 예사롭지 않다. 4·3 보궐 선거에서 여당은 단 한 곳도 승리하지 못했다. 작년 6·13 지방 선거에서 여당은 전례 없는 압승을 거두었지만 불과 10개월 만에 민심이 판이하게 돌변하고 있다. 범여권은 단일화를 하고도 영남에서 진보 성향 유권자가 가장 많은 경남 창원·진산 선거에서 504표 차이로 신승했다. 민주당은 작년 통영 시장과 고성 군수 선거에서 모두 싹싹이했지만 통영·고성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선 한국당 후보에게 23.5%포인트 차이로 완패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곁잡을 수 없이 추락하고 있다.

한국 껌의 4월 첫째 주(4월2~4일) 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41%로 추락하면서 취임

‘국민 모두의 대통령’을 위한 통치 연합 만들어야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부정 평가도 49%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최저 임금 인상과 근로 시간 단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 층에서 긍정/부정률은 37%/54%, 저소득층에서는 31%/60%였다. 현 정부 핵심 지지층이었던 학생(33%/56%)과 서울(38%/52%)에서도 긍정 평가가 30%대로 급락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2년 만에 왜 이런 엄청난 민심 이반이 발생했을까? 경제 위기, 인사 참사, 청와대의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분노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다. 선거를 치르듯이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셀리그먼(Seligman)과 카빙톤(Covington) 교수는 ‘선거 연합과 통치 연합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위기를 분석했다. 그들은 새 대통령에 대선 때 자신을 지지했던 선거 연합을 깨고 다른 세력으로 통치 연합을 만들면 필연적으로 리더십의 위기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가령, 김영삼 대통령은 1995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1992년 대선 당시 선거 연합인 3당 합당의 한 축이었던 충청의 김종필 총재를 집권당에

서 쫓아냄으로써 선거에서 패배했다. 그 이후 97년 대선에서 김대중 총재와 김종필 총재의 DJP 연대에 정권을 빼앗겼다. 노무현 대통령도 지역주의 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호남 세력에 등을 돌리고 민주당을 탈당해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면서 무너졌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선거 연합과 통치 연합의 부조화가 아니라 두 연합의 비정상적인 유착으로 민심 이반이 가속화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민주당, 참여연대를 포함한 진보 시민단체, 그리고 운동권 세력과 거대한 선거 연합을 만들어 집권했다. 그런데 집권 후 이들 선거 연합 세력들에 대한 부채 의식과 지나친 유착으로 국정 운영의 동력을 스스로 상실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친노동 정부를 등에 업고 오만의 극치를 보이며 안하무인의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가령, 탄력 근로제 확대 입법을 저지하겠다는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서에서 취재 중인 기자를 집단 폭행했다. 공권력이 민주총

의 눈치를 보면서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 야권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노총 공화국이다’라고 맹공을 퍼붓고 있다. 권력을 견제해야 할 시민 단체는 극도로 정치화되면서 정부의 각종 인사에서 혜택을 보고 있다. 행정부, 청와대, 사법부, 공공 기관의 핵심 인사가 진보 시민단체 출신들로 채워지고 있다. 공정해야 할 인사가 오로지 ‘정치 공학’에 의해 움직인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렇다 보니 인사 참사가 끊이지 않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마저 불거지고 있다.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현 정부에서는 운동권 인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해 핵심 요직에 포진되었다. 그런데 이들의 강한 이념적 편향성으로 경제 정책은 현실성이 무시되고, 외교 정책에서는 오랫동안 다져 온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면 용단을 내려야 한다. 법치 훼손, 인사 참사, 정책 실패를 몰고 온 파행적인 선거 연합을 깨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을 만드는 새로운 통치 연합을 만들어야 한다.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다.

종교칼럼



장헌균  
광주 서정교회 담임목사

1948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시인 T.S. 엘리엇은 그의 시 ‘황무지’ 제1부 ‘죽은 자의 매장’에서 “사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 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고 노래했습니다. 시인 신동엽도 “꿰데기는 가라/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꿰데기는 가라/...꿰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린 흙가슴만 남고/ 그,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고 노래했습니다. 이처럼 시인들이 사월을 잔인한 달과 ‘꿰데기는 가라’고 말하는 것은 봄이 사라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필자는 4월이 되면 역사의 밑알이 된 사람들에게 마흔의 편지를 쓰곤 합니다. 먼저 미국 남북 전쟁에서 승리해 연방

사월의 편지

을 보존하고 노예 해방을 위해 헌신했던 에이브러햄 링컨 미국 제16대 대통령(1865년 4월15일 암살)이 떠오릅니다. 또한 독일 나치 정권에 저항하며 말씀을 현상에서 실천하다 순교한 독일의 청년 신학자 디트리히 본회퍼(1945년 4월 9일 처형) 목사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 때 인사 참배를 거부하고 민족의 십자가를 지고 순교한 주기철 목사(1944년 4월21일 순교)도 생각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승만 정권의 부정 선거에 항의하다가 행방불명된 후 마산 앞 바다에서 주검으로 발견돼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김주열 열사가 있습니다. 민청학련을 배후 조정했다는 혐의로 인혁당 관련자들이 사형 선고 다음날 교수대에서 목숨을 빼앗겼던 날도 4월 9일입니다. 또 야만의 독재에 항거하며 스스로 목숨을 민족 제단에 바치고 자유를 향해 날아간 또다른 젊은이가 바로 김상진 열사(1975년4월12일)입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제주도 4·3 항쟁은 한국 현대사에서 한국 전쟁 다음으로 많은 역술한 희생자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쓴 편지는 먹막하지만 역사의 밑알이 된 정의의 편지입니다.

특히 필자는 사월이 되면 하늘의 바람과 별이 된, 차마 부를 수 없는 꽃들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304개의 꿈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세월호 5주기가 지나도 기억해야 할, 2014년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4명 한 명 한 명의 이름입니다.

필자는 날마다 세월호 달력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이들 생일과 이름을 기억하면서 안부를 전하는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들이 있습니다. 권재근·혁규 부자, 남현철(단원고 2학년 6반), 박영인(단원고 2학년 6반), 양승진(단원고 교사), 세월호 유가족 ‘꽃누르미’ 모임 ‘꽃마중’에 있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필 봄이었습니다. 꽃들이 막 필 때였지요. 한동안 꽃들은 필도 보기 싫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어쩌할 바를 모르고 보낸 아이들입니다. 고이 보내지 못한 아이들도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활짝 핀 꽃을 보는 것이 여전히 두렵고 미안합니다”

이처럼 꽃만 봐도 서러운, 잔인한 4월을 한번씩 보내고 있습니다. 사라져버린 다섯 해의 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진실과 정의는 보이지 않습

니다. 아니 기억을 지워내는 일만 하고 있는 듯합니다. 통곡과 고통의 바다인 팽목항에 기억 공간이라도 만들어 달라는 요구는 버겁기만 합니다. 평화로운 광장을 지키던 천막들도 기억의 공간도 자리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필자의 가슴에는 세월호 목격자가 걸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만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노란 리본을 떼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잊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센 샷바람 뚫고/ 씬없이 연두빛 자라/ 피고 또 피어// 어려오는 가슴/ 엷은 해무 위로/ 부표처럼 떠오르는/ 보고픈 잔물결 일렁인다// 끝없이 흘러 흘러/ 아련히 수평선 가슴에 멎든 쪽빛// 침몰한 시간 바라보며/ 고요 속에 속울음 삼키며 / 차마 부를 수 없는/ 꽃 이름 또다시/ 읊조린다”(홍시 ‘4월의 안부’ 전문)

지금 교회에서는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4월은 잔인함과 껌데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다섯번의 보리밭에 새싹이 돌아오는 4월입니다. 절망과 잔인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부활의 소식이 있는 편지를 전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社說

광주·전남 시도 상생 구두선에 그쳐서야

광주시와 전남도가 정부 공모 사업 등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어 지역 발전에 역효과가 우려된다. 양 시도는 오는 30일까지 예정돼 있는 보건복지부의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 공모에 응모할 예정이다. 국·지방비를 통틀어 156억 원 규모의 이 사업에 광주시는 장애인 고용을 위한 서비스 수요가 많다는 이유로, 전남도는 어린이 의료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내세워 유치전에 나섰다.

첨단 사업을 놓고도 광주시는 최근 AI(인공지능) 집적화단지, 국립 심혈관센터 등을 중심으로 광주 북구·광산구, 장성군 진원면 일원 개발제한구역에 연구개발특구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전남도는 광주연구개발특구의 확대를 통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내 한전공대를 중심으로 한 부지를 강조특구로 지정하는 용역을 발주했다.

자동차 사업 부문에서도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사업’ 대상자인

빛그린산업단지에 친환경자동차산업 집적화 단지를, 전남도는 영암군 삼호읍 일원에 미래 레저형 친환경자동차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사실상 유사·중복 사업으로 분류돼 정부 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형안이다.

지자체가 지역 발전을 위해 전략을 짜내고 사업 추진에 공을 들이는 일은 너무 당연하다. 하지만, 공동 운명체나 다름없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불필요한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사업을 놓고 다투면 시너지 효과가 반감될 것이 자명하다. 시도 상생의 초심을 잃으면 블루오션은 결국 레드오션으로 전락할 것이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상생 발전하기 위해서는 목은 현안은 물론 새로운 사업 추진과 관련한 조정·관리 기능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지자체 간 출혈·과당 경쟁을 유발하는 공모 사업 등을 대폭 손질해 명실상부한 지방 자치와 분권이 실현되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죽산보 해체 논란 정쟁 도구로 삼아선 안 된다

영산강 죽산보 해체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당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1명은 지난 10일 죽산보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 점검과 주민 의견 수렴이 목적이라지만 실제로는 죽산보 해체 방침을 규탄하는 자리였다. 자리를 함께한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이나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기보다는 해체 반대 논리를 들이대며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들을 추궁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의원들은 농업용수 부족을 보 해체 반대 논리로 주장하면서 보 해체는 지난 정부의 공약을 지우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보 해체에 관한 여론 조사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주로 광주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기도 했다. 한국당의 죽산보 방문은 그렇지 않아도 지역에서 죽산보 해체 여부를 놓고 빚어지고 있는

갈등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이날 현장에서 보를 해체해야 한다는 시민·환경단체와 해체를 반대하는 측이 고성과 함께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제1야당으로서 지역 현안 점검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찬반 여론이 팽팽하고 그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쪽의 입장을 듣기보다는 보 해체 반대 의견을 공격하기에 주장하면서 정부 관계자를 압박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한국당은 지난 3월 4일 공주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공주보 해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죽산보 현장 방문도 겉으로는 여론 청취라고 하지만 실은 4대강 보 해체 반대를 위한 여론 몰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죽산보 해체 찬반 논란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해선 안 될 일이다. 갈등을 부추켜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한다면 결국 국민이 표로 심판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無 等 鼓

대형 건물 화재나 산불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할 때 흔히 거론되는 ‘불문마(不問馬)’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말(馬)’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는 뜻인데 사람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 단어는 공자의 언행을 기록한 논어(論語) ‘향당편’(鄉黨篇)에 나오는 구절(‘鹿炭 子退朝曰 傷人乎 不問馬’)에서 연유한다. 이 문장은 ‘마구간에 불이 났다. 조정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공자가 서 말쑥히 사

기사에는 ‘수장궁(壽昌宮)이 화재를 당하였다. 실화(失火)하여 침실에서 시작해서 대전(大殿)에까지 불길이 미치었는데, 대신 모두가 불을 끄려 달려들었다. 이때에 사교(史庫)가 수장궁 안에 있었는데, 입직하던 사관(史官) 노이(盧異)가 사고를 열고 손수 사책(史冊)을 꺼내었다.

이에 임금이 놀라고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공궁은 이미 불타서 구제할 수가 없으니, 사람이나 상하지 말게 하라!”라고

불문마

기록돼 있다. 수장궁은 태조 이성계가 조선 개국 후 즉위식을 가진 곳이자 정종이 머물며 정

사를 보던 의미 있는 궁궐인 만큼 지켜야 할 이유가 있었고, 불을 낸 이에 대한 처벌을 내릴 만했지만 정종은 사람이 상하지 않기를 바랐다고 한다.

역대 최대 규모인 최근의 강릉도 산불에 대한 대처는 단호하고도 신속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화재를 계기로 야간이나 강풍이 불 때도 운항이 가능한 소방 헬기 도입 등 소방관들이 좀 더 안전하게 불을 진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 /재희중 사회부장 chae@

기 고



양세영  
홍익대 겸임교수·한국청렴연구원장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전남도와 광주시교육청이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광주시와 전남교육청도 전년과 마찬가지로 중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 시군구도 등급 평균이 각각 3.2, 3.47, 3.2로 중간 이하의 성적을 나타내고 있다. 심지어 나주 혁신도시 소재 11개 평가 대상 공공기관도 등급 평균이 3.18로 평균을 하회하고 있다.

총체적으로 평가하자면 지난 5년여 동안 광주·전남은 청렴도 하위권 울타리에 갇혀 있는 답답한 상황이다. 타 지역에 비해 청렴도가 낮은 결과에 대해 역대 단장들은 주민에게 사과도 하고 특단의 대책을 약속하며 강도 높은 추진을 공언하였다. 그럼에도 현장에서의 부패 근절로 이어지지 않아 백악이 무효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자칫 지역 청렴도가 만

광주·전남 청렴도 하위권 고착화 우려된다

년 하위권에 고착화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광주·전남의 청렴도를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방안은 없는 것일까?

무엇보다 먼저 청렴도 평가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필요하다. 청렴도 결과가 좋지 않은 기관들은 평가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조적 환경을 핑계로 우수 등급 확보는 어렵다고 자조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청렴도 평가는 기본적으로 인식 조사로서 표본이 적고 조사 대상과 방식 등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청렴도 평가는 정부가 추진하는 부패 통제 시스템의 하나로서 이러한 한계와 조건은 공공기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문제는 단장장부터 모든 직원들이 우리 조직은 청렴도 최우수 기관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는 확신과 공감대를 갖고 있어야 한다. 예컨대 2010년, 2011년 연속 전국 광역단체 중 최하위였던 부산시가 2018년 1위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교육과 자문을 통해 부산 지역 단체장과 공직자들에게 청렴도 1위의 확신을 심어준 바 있다.

다음으로 효과적인 전략과 대책을 제대로 집행해야 한다. 다른 지역 공공기관들도 경쟁적으로 시책을 개발하고 시

행하고 있으므로 형식과 내용면에서 차별성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우선 안타까운 사실은 인프라 측면에서 광주·전남 지역에는 청렴 현황을 진단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며 실행을 피드백할 수 있는 전문가와 전문 기관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가 아닌 감사 담당자들이 행동 변화와 조직 개발의 영역에 가까운 청렴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적합하지도 않다.

추진 전략 면에서는 국가 청렴도를 발표하는 국제투명성기구의 총체적 접근 전략(Holistic Approach)을 참고할 필요가 크다. 총체적 접근은 제도과 시스템 구축, 철저한 적발과 처벌, 조직 문화와 의식의 변화를 일체화시켜 집행하는 것이요 이의 관건은 적극적인 투자와 모니터링이다. 예컨대 대부분 공공기관이 청렴 교육과 옴부즈맨 제도 같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교안 개발과 강사 선정, 전문가의 참여 등에 대한 투자와 지속적인 점검을 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청렴도 평가 결과의 차이는 사실상 여기서 좌우된다.

아울러 실질적인 청렴 협력 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 단기적인 청렴도 제고는 공공 기관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므로 공공기관·지역 시민단체·민원인·지역

업체·연관 등 모든 이해 관계자가 협력 체계를 이루어 상호간 이해 증진은 물론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켜야 한다. 혹자는 광주·전남 지역의 경제체적 낙후와 지역 주민의 강한 권리의식 등 지역 여건과 정서를 청렴도 제고의 구조적 장애 요인으로 들고 있으나, 2009년 광주시가 1등급, 전남도가 2등급을 달성한 적도 있기 때문에 구조적 요인으로 탓하는 것은 맞지 않다. 설혹 그런 요인이 있더라도 효과적인 협력 체계 구축은 이러한 점을 오히려 긍정적인 요인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 특히 전남도와 광주교육청 등 주요 공공 기관은 주민이 참여하는 청렴 거버넌스를 통해 청렴 시책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회복하게 함으로서 외부 청렴도가 대폭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청렴도 제고는 단순한 평가 등급 상승 이상의 의미가 있다. 청렴도 평가 등급 상황을 통해 궁극적인 목표인 광주·전남의 청렴한 조직 문화 수립에 대해 자신감을 얻고 시도민의 신뢰를 복구할 수 있으며 청렴한 역사 전통을 자랑하는 호남인의 자부심을 되찾을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나아가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 지속되어야 할 국내외 기업의 유치와 정부 예산의 확보를 위한 소중한 자산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국특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팀	220-0515 문화사업팀
220-0649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220-0632	220-0652	기획관리팀	227-9600 업무팀
220-0663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220-0664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220-0642	220-0697	(FAX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